

IIRI Online Series

한국판 인도-태평양전략과 북핵 문제

김민성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연구교수

2022. 10. 28

한국판 인도-태평양전략과 북핵 문제



김민성 |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연구교수

2022년 5월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의 인도-태평양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립한다는 윤 대통령의 구상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정부 역시 연내에 한국의 인태전략을 구체화하여 발표할 것임을 언급하면서, ‘한국판 인도-태평양전략’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동 지역에 대한 높은 관심은 일본을 시작으로, 미국뿐 아니라 호주, 프랑스, 독일, ASEAN 등이 전략(Strategy), 구상(Initiative), 지침(Guideline), 전망(Outlook)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최근까지 정책 기초를 발간해 온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 정부의 동 지역에 대한 대응은 비교적 늦은 감이 있다. 또한, 대만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 수급 불안정, 원자재 가격 하락 등과 같이, 2022년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제-안보 도전요인들이 발표 내용에 대한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판 인태전략이 주는 함의와 국익 차원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 궁극적으로 한국판 인도-태평양전략에는 지역에 대한 한국의 비전을 담아냄과 동시에 우리의 가치와 국익이 투영되어야 한다. 특히 북한 핵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역내 국가들의 관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판 인도-태평양전략의 의미

한국판 인태전략이 발간될 경우, 국내외적으로 몇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 한국은 역대 정부를 통해 동아시아 또는 동북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정책을 발표해 왔는데, 이러한 정책의 지리적 범위가 인도-태평양으로 확대됨을 천명하는 것이다. 지리적 범위를 새롭게 설정하는 것은 한국의 지역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외교의 외연이 확대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국은 지역 아젠다에 대해서는 중층적 접근을 지향하고, 역내 국가들과의 양자관계, 소다자관계, 지역제도를 통한 다자관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역 국가들과의 연계성(connectivity) 강화를 언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를 통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 도모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인태지역에 대한 한국의 '능동적 비전'은 윤석열 정부에서 구상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Global Pivotal State)로의 발전에 있어 주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판 인태전략은 대외적으로는 한국의 지역 전략의 중요한 지침서(guideline)이자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역내 국가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 여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 역시 인도-태평양지역이 가진 다양한 잠재력에 관심이 있고, 이러한 인식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역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인도 등에 대한 한국의 접근성 강화, 인식의 확대, 주요 협력 아젠다 등을 설명함으로써, 지역 국가들은 한국의 정책적 의지를 평가할 수 있다. 일례로, 이번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확대, 계승하겠다고 표명한 만큼, 동남아 지역에 대한 한국의 정책적 지속성을 강조할 수 있다. 나아가 협력의 확대 가능성, 국가별 차별화된 접근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면, 한국의 지역협력 정책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이 외에도 한국의 주요 관심 아젠다를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에 맞춤형으로 포함하는 것도 유의미하다. 동남아 국가들과의 개발협력 프로젝트, 인도와의 IT 기술개발 협력, 남태평양 도서 국가들과의 기후변화 공동 대응 등 협력 사안 발굴을 통해 역내 국가들과의 포괄적인 파트너십 역시 고려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미국은 한국판 인태전략을 통해 동 지역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할 것이다. 2022년 2월 발표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과 관련, 미국은 한국과 어떠한 아젠다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협력 가능한지를 가늠해 볼 것이다. 즉 동 지역문제에 있어서 동맹 간 인식을 확인하고 행동의 수준, 범위 등에 주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미 동맹국인 호주, 일본 역시 한국과 지역 사안별로 어떠한 접근을 함께, 또 따로 할 것인지를 고려하는 데 한국판 인태전략을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중국에게는 한국의 인태지역에 대한 정책 발표가 미국 주도의 대중 견제에 관한 한국의 인식과 관여 정도를 나타내는 메시지로 작용할 수 있다. 오히려 이러한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한국은 동 지역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대중 견제의 성격이 아닌 한국의 이익과 맞물려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한국판 인태전략의 발간은 국내적으로도 한국의 지역 전략이 왜 인도-태평양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설명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동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경제 성장의 잠재력을 보유한 곳으로 지정학과 지경학이 맞물린 곳이다. 세계 인구의 60% 정도가 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지난 5년간 세계 경제 성장의 2/3를 차지해 왔다. 특히 전 세계 인구의 17% 정도를 차지하는 인도와 8.6%를 차지하는 ASEAN 지역을 제외하고 미래의 성장전략을 마련하기 어려운 만큼 동 지역 국가들과의 연계성 강화, 다양한 중장기 프로젝트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례로, 한국은 원유 수송의 90% 이상과 수출입 물량의 30% 이상이 말라카해협과 남중국해를 통과함에 따라 동 지역 해양안보가 우리의 경제와 직결되어 있다. 이미 가입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를 비롯하여 동 지역에 대한 한국의 관심과 참여 수준(level)은 미국의 요구에 의한 것이거나 중국을 의식한 것이 아닌, ‘지역의 중요성’과 그 이면에 있는 우리의 ‘국익’이 직결되어 있는 상황평가에 기반을 둔 접근(approach)이라는 점이 설명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인식과 평가는 인도-태평양지역 외교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는 데에도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북핵 문제의 심화와 한국판 인태전략

한국판 인도-태평양전략은 새로운 지역 전략으로서의 능동적 비전과

역내 국가들과의 경제, 안보 등 다양한 협력에 대한 정책들을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러한 와중에도 반드시 강조하여 다뤄져야 하는 핵심 사안 중 하나는 북한 핵문제이다. 다양한 위협요인들로 글로벌 및 지역 안보환경의 예측이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북핵 문제만큼은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는 듯하다. 즉 핵능력 고도화를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북한의 의지가 꺾일 확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2022년 들어 다양한 북한의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다. 10월 15일 기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방사포를 포함하여 무려 31회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은 북한이 가장 강력한 제재를 맞이했던 2016~2017년의 미사일 도발 횟수를 능가한 것이다. 또한, 핵무력 법제화를 선언하고 한국을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 등을 통해서도 북한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11월 미 중간선거 전후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의 매직넘버라고 일컫는 ‘6차’를 넘어(인도와 파키스탄이 6차례의 핵실험으로 ‘사실상 핵보유국(*de facto* nuclear state)’ 반열에 오른 차수) 7차 실험을 감행한다면, 한반도 안보환경뿐 아니라 지역 및 국제사회에 여러 함의를 줄 수 있다.

이렇듯 북핵 문제는 한국의 생존 및 안보와 직결된 최우선 도전과제이자 인도-태평양지역의 안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안이다. 한국판 인태전략을 통해 북핵이라는 실존 위협에 대한 동맹 및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며, 한미 간 확장억제 강화, 한미일 3자 협력의 필요성 강조는 기본일 것이다. 나아가 인태지역 국가들에게 지역 전략환경의 안정성 확보 여부가 곧 각국의 경제-안보 상황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북핵 위기관리에 대한 협력 공감대 구축을 역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북한의 7차 핵실험 이후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에서 핵무장 논의 가능성이 불거질 경우, 지역 안보의 새로운 변수가 가시화될 수 있으며 이는 현재의 불안정성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의 시발점은 북한 문제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관심과 관여라는 점을 상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어 북핵 문제가 다시 협상 국면을 맞이할 경우, 역내 국가

들과 다자 차원의 한반도 협력 아젠다를 발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바, 지금의 북핵 위기관리에 대한 관심은 핵문제 해결 과정에서도 실질적이고 높은 수준의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도 정부는 미국에게는 북핵 문제를 인태전략 차원에서 적극적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중국에게는 한국판 인태전략이 대중 견제가 아닌 우리의 생존과 안보에 부합하는 지역 전략임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다양한 미사일 재원을 단기간 내에 섞어 쏘면서, 한국뿐 아니라 일본, 미국 등 인도-태평양지역 국가들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키고 있다. 그러나 국내뿐 아니라 국제사회는 북한 핵문제를 다루어온 지난 30년간의 부침을 통해 사안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는 듯하다. 최근 제기되는 비핵화 실패, 북한의 핵보유 인정, 핵군축 협상 가능성과 같은 일련의 문제 제기들은 다양한 선택지로서 학문적-정책적 조명이 필요하고, 대응전략 마련 차원에서도 현실적으로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지근거리에서 북한의 핵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뼈아픈 부분이다.

이미 인도-태평양지역에 대해 지침, 정책, 전략서 등을 발표한 국가들 역시 자국이 우선하는 이익들이 동 지역에 대한 인식, 평가, 협력 아젠다 등과 연계되어 함께 명시되어 있다. 우리도 한국판 인태전략 발간을 통해 동 지역에 대한 능동적 비전뿐 아니라 북핵 문제를 포함한 우리의 국익에 기반을 둔 핵심 아젠다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상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끝/

저자 소개

김민성 연구교수는 현재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책임연구원,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미주연구부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했으며, 서울여대, 단국대를 거쳐 고려대 국제대학원에서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최근 논문으로는 “파키스탄 및 북한의 핵전략 연구: 비핀 나랑의 비태칭 확산 태세의 접근과 한계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2022), “인도-태평양전략 대 일대일로의 충돌 동향과 한국의 외교안보전략” (『전략연구』, 2021) “대이란 경제제재 효과성 검토와 북한에의 함의” (『국제관계연구』, 2020) 등을 발표하였으며, 북한 핵문제, 한미동맹 및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등을 주제로 다양한 국내외 연구과제에도 참여해 오고 있다. 2019년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이란 핵협상과 경제제재 간의 연계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Email: minkim@korea.ac.kr)

